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고지서 받기 전 알림 메시지 보내드려요... '11월 1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

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달말까지 기한 후 신청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기한 후 신청대상자 22만 가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21.6.1 기준)일 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가구에 지급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원래 5월까지 정기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에 더해 안내대상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기 신청했을 때는 100% 온전히 받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는 장려금은 10% 감액해서 지급된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어야 지급이 가능하다.